

투데이 칼럼

대북 인도적 지원, 우리에게 더 가치있는 평화

하바스크에서 며칠을 보내고 밤새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승용차로 1시간30분 거리의 인구 20만의 중소도시 우수리스크시는 고려인이 약 2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이자 중국을 관통하는 철도가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러시아 육군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때 합일무장투쟁의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박보경

여행작가 겸 칼럼니스트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최재형 선생은 상당한 재력가로 대동공보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최재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는 대동공보사에서 안중근의사는 1905년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맺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토미로부미를 저격하기로 하달린것을 계획했다.

실질적인 안중근의 후견인이었던 최재형선생은 전 재산을 합일무장투쟁에 기부하는 등 최재형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유해비가 고려인들에 의해 우수리스크에 세워졌다.

필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우수리스크 역사탐방을 했다. 최재형 선생의 고택과 독립운동가인 대한협동회 회장 이상설 선생의 유해비 그리고 고려인 문화 센터 연해주 신촌기념탑등을 둘러보고 왔다.

최초로 1893년 함경북도에서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합일민족운동의 본거지가 우수리스크와 연해주라고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로 합일민족운동의 요람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렇듯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신분과 이념을 초월해 조국해방에 온몸을 바친 선배들은 동포애로 대동단결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니가 수구보수세력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북 식량 인도적 지원 기사에 어김없이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북한에 돈을 보내냐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생각이 다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한다. 그대 우리 주변부터 더 돕자는 그 뜻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면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막상 우리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나 복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심지어 그런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비난한다.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가진 본성인 측은지심에서 발로한 것이다.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그제 누가 되었든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이 불쌍하다면 북한의 굶주린 아이도 당연히 불쌍하다고 느껴야 정상이다.

여력이 없어 다 돕지 못해 마음이 아플 순 있지만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쥐라'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건 측은지심을 방기한 이기심이다.

더 이상 이기심을 측은지심인 양 포장해 자신을 속이지 않길 바란다. 게다가 실제 세금을 어디다 날린지도 모르는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만 없었어도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도 남았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비판은 그런 것에 해야 한다. 굶이 계산기를 두들겨야 마음이 편한 이들을 위해 한마디 보태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결국 우리에게 천만배 더 가치있는 평화로 돌아온다. 이보다 아름다운 거래가 또 어딤는가.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지만 받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참 마음이 불편하다. 마치 800만 달러를 북한 정권에 갖다 주는 것처럼 들만하기 때문이다.

좀더 데테일하게 말하자면 이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직접 주는 돈이 아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이 돈 중 450만 달러는 국제식량계획(WFP)가 북한 영양지원 사업

에 사용할 예정이다. 택사, 소아 병동, 고아원 등에 사용된다.

남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가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쓸 예정이다. 주로 아동, 임산부, 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 필수 의약품 및 치료식을 제공하는데 쓰인다.

북한 관료들은 전혀 없는 현장 접근권을 줄만큼 식량과 의료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념에 따라 감정온과 북한 정권을 욕하는 것도 좋다. 필자도 그들을 북한 권력의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 인도적 지원은 이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이다. 그것이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우수리스크에서 우리 선배들의 유적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민족운동의 정신은 오간데 없고 이념이 다르면 적대적으로 내부의 총부리를 겨는 불쌍해나운 모습이 과연 필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한반도를 벗어난 세상밖의 우리민족은 이념적 갈등보다 동포애적 개념으로 우수리스크의 고려인을 처럼 어우러져야 할 삶이는데...

좌우 이념에 함몰된 고풍한 흑백논리의 이데올로기로 부터 벗어나 측은지심의 동포애로 굶주리고 헐벗은 북한을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으로 통일의를 틀을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경계하고 투쟁해야 할 상대는 경제와 문화의 주권을 잠식하려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념이 참으로 무성긴하다.

사설

전기자동차 생산 속도 내야

군산형 일지리에 속도를 내야겠다. 지난달에도 군산형 일지리가 어찌 되고 있다고 몰았었거니와 지금은 군산형 일지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광주형 일지리가 마무리가 되면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지리 지역으로 논의될 거라고 여담 대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실직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살리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겠다. 이번엔 군산이 전기 자동차 생산기지로 도약한다고 도내 모든 언론사들이 보도를 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자본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지역을 위해 상생형 일지리를 내겠다며 모델 투자 계획이며 추진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는데 발빠른 정보라고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인 문성현 씨 등 인사들이 참석해 방향을 논의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믿는 군산 시민은 별로 없을 터이다. 지난날 전북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제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지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주식회사 명신이 2550억 원을 투입해 643명에게 새로운 일지리를 제공하겠다는 투자협약식을 가졌어도 점차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려던 앞으로 수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까닭이다. 투자협약식의 자리에서 다들 웃는 낯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사전을 찢은 것처럼 앞으로의 실행도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군산형 일지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나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것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주식회사 명신이 전기 자동차 생산을 약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전북형 일자리 구축으로 인구 감소 막아야

전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들은 중 반가운 소식이었다. 전북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느냐도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이번에 도내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반짝 보도가 있었지만 비교 현실은 여전히 전국 꼴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취업률이 상승했다해도 전국 최하위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고용동향을 장기적으로 보지않고 안파를 뽀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가 특별해야겠다. 의회위가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진제 원안경찰서 교통안전계경사

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오래전 부터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비교적 괜찮다는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해오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등 여러 곳에서 실업자가 많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증가 때문에 도민들은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은 적당히 성과를 내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전북도가 말한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주어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야 한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북도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구상과 방안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모두의 노력 필요

지난 2016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부상이나 불법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인권 존중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집회의 자유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의 정도에 비례한 엄격하면서

도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화경찰관 운영, 인권교육 강화, 무전복음, 소속·신분 식별표시 부착 등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국민과 경찰이 함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창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경장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진제 원안경찰서 교통안전계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hip on the sea with a sun/moon in the background. Text include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 courage and hop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by more people, a newspaper with readers), and '전주매일' (Jeonju Daily) logo.